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 '2025 여성금융포럼'서 금융기업 유치 등 중장기 특화 전략 소개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반영 자체 개발계획 수립 하반기 중 금융위에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전국의 여성 금융전문가들과 공유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여성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도시 구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여성 금융산업 종사자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사)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전국 단위 행사로, 금융기관 지점장 및 부장급 이상 여성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정보 교류,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킹 중심 행사로 진행됐다.

도는 포럼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지역적 장점을 토대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금융기업 유치, 금융교육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중장기 금융특화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자산운용 중심 금융 특화 도시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전북도는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2028년)'에 해당 구상을 반영하기 위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여성 금융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

하고,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리더들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융은 인제 중심 산업이며, 전북은 국민

연금을 보유한 자산운용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여성 금융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이 전북의 금융도시 도약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자산운용 기능은 전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협의를 통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금융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여성금융포럼'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여성 금융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금융도시 구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여성 금융전문가들과 공유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ESG 경영 인식 높으나 실행은 여전히 걸음마'

54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ESG경영의 큰 어려움으로 전문인력 부족·재정 부담 등이 꼽혀

전북 사회적경제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식은 높지만, 실제 실행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SG 실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재정지원,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ESG 국가정책연구소(소장 지용승)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병래)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추진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지역 맞춤형 ESG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 응답 기업의 약 90%가 ESG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했으며, 약 18.5%는 ESG를 경영 전략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주 있다(44.4%), 가끔 있다(24.1%), 전혀 없다(13%)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ESG 활동은 '지역사회 기여' 중심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 경영의 환경(E)과 투명한 의사결정 및

기업 정보 공개 등의 지배구조(G) 부분의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30%)', '재정 부담(25%)', '정책 지원 미흡(20%)'이 꼽혔다. 이는 대다수가 1~5인의 소규모 조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설문에 따르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재정지원(26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관료개혁(15명)', '교육 및 컨설팅

(14명)', '공공조달 연계' 및 '법 제도화'(각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실행 가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고,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은 조직 규모 및 단계별 ESG 교육 프로그램 개발, ESG 실천 기업 대상 인증 및 금융 혜택 연계, ESG 우수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지역 내 ESG 지원기관-기업 협업 플랫폼 구성 등이 있다.

김병래 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단계별 교육·컨설팅, 인증제 연계, 공공조달 기반 확대 등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부안군 격포항 수산시장이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고 새롭게 단장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9일 정식 개장식을 열고 있다. 사진은 권익현 부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딛고 '새단장'

총 20억원 투입... 도·부안군 신속 복구
안전성·현대화 갖춘 시장으로 재탄생

부안군 격포항 수산시장이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고 새롭게 단장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9일 정식 개장식을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상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시장 순시, 수산물 시식 등 개장을 축하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다.

격포항 수산시장은 지난 1월 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전체 20여 개 점포 중 11개가 전소되고 9개가 반소되는 등 약 1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운영이 전면 중단됐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은 상인들의 생업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공사를 신속히 추진했다. 공사는 4월 9일 착공해 약 두 달 반 만인 6월 말 완료되었고, 7월 1일부터 시장 운영이 재개됐다.

새롭게 문을 연 격포항 수산시장은 2층 건물(연면적 1,322㎡)로 안전성과 현대화를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는 수산물 판매점 25곳이, 2층에는 식당 1곳이 들

어서 상인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재개장을 통해 격포항 수산시장을 부안군을 대표하는 수산물 명소로 키우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격포항 수산시장은 단순한 재개장을 넘어 상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자,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의 미중들이 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월 21일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로부터 오늘의 재개장에 이르기까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상인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재개장식은 시장 하나를 다시 여는 일이지만, 이 속에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미래를 향해 다시 걸여가는 우리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격포항 수산시장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지역과 외부가 소통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임실군의회
IMSIIL-GUN COUNCIL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

